

생명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경제 시론

김기섭

차 례

1. 교환의 세 가지 방식과 시장사회로의 진입

- 자연과 인간의 교환 _ 8
- 인간과 인간의 교환 _ 13
- 호혜와 재분배의 등장 _ 15
- 교역의 등장 _ 19

2. 시장사회의 도래와 사회적경제를 통한 방위

- 시장사회의 출현과 특징 _ 22
- 내포 → 의존 → 분리 → 지배 _ 27
- 시장사회의 위기, 사회의 방위 _ 29
- 사회적경제의 재등장 _ 32
-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 _ 36

3. 생명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판과 수렴 - 아니다 그럴대(不然其然) _ 39
- 사회적경제의 주체와 그 행위 동기 - 지기금지(至氣今至) 원위대강(願爲大降) _ 43
- 사회적경제의 경제 행위 - 시천주(侍天主) 조화정(造化定) _ 49
- 사회적경제의 시공간 - 영세불망(永世不忘) 만사지(萬事知) _ 53

강화도 앞바다에 흑선이 출몰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19세기 말에 처음 출몰한 흑선 위에는 ‘제국’의 깃발이 펄럭였고, 무장한 총칼이 각가지 진귀한 상품들을 지키고 있었다. 상품들 사이사이로 상인들이 분주히 돌아다녔고, 조선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자신의 오랜 시장을 내주어야 했다.

20세기 말에 두 번째 흑선이 출몰했다. 흑선 위에는 ‘자유’의 깃발이 나부꼈고, 선린과 우호로 치장하며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있었다. 돈 께짝 사이사이를 자본가들이 어슬렁거렸고, 조선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자신의 오랜 신용을 넘겨야 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흑선이 출몰했다. 흑선 위로는 ‘사회’라는 깃발이 팔랑이고, 희망과 대안으로 장식한 배 안에는 잃어버린 시장과 신용을 되찾을 묘안들이 가득하다. 지혜의 상자 위에 지식인들이 걸터앉아 이 새 물건을 조선에 어떻게 내려놓을지 궁리 중이다.

첫 번째 흑선이 시장을 빼앗고, 두 번째 흑선이 신용을 빼앗았다면, 세 번째 흑선은 그나마 남은 정신마저도 빼앗을 참이다. 제국주의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자본주의에 이어 복합사회 사회적경제가 상륙할 태세다. 나에게 있어 작금의 사회적경제 붐은, 지난 흑선의 도래와 비견될 만큼 위험한 일이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물건을 잃고 신용을 잃은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지 모른다. 물건과 신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경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사회적경제는 지금 우리

에게 매우 절실한 대안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경제가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살아 있는 사회적경제였을 때 이야기다. 관례적인 사회적경제여서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오히려 그나마 있는 정신마저도 빼앗게 될 것이다. 첫 번째 흑선이 도래했을 때, 수운 최제우 선생이 관례적 유불선과 서학을 넘어 동학을 통해 우리의 정신과 삶의 방향을 잡아준 것도 아마 같은 취지에서였을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새로운 흑선의 출몰로 새로운 듯 보이거나 낡은 대안들이 세상을 풍미할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살아 있을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방향을 세워야 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이 글은,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살아 있을 사회적경제의 대략적인 상을 정립하는 시론으로서의 목적을 담는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라 함은, 사회적경제 목적의 적합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에게 살아 있을 사회적경제라 함은, 사회적경제 주체의 창발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합목적성과 창발성을 담아낼 사회적경제를 위해, 나는 생명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를 바라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1장에서 나는 사회적경제가 태동하기 전까지 우리 인간의 경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전개되었는가를, 교환의 세 가지 방식인 호혜·재분배·교역의 역사를 통해 되돌아보고자 한다. 이런 방법으로 인간의 경제사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호혜·재분배·교역이 실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태동한 것이고, 시장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떤 교환 유형이 어떻게 생겨서 다른 교환 유형과 어떻게 관계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2장에서 나는 시장경제의 국내외적 확장 과정에서 공동체 경제가 사회적경제로 변모하는 과정을 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어떤 이유로 재등장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나아가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정리할 것이다.

3장에서 나는 이런 사회적경제의 관례적 개념과 목적을 대신해, 생명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를 언급할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경제의 주체, 행위, 시공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작은 시

론을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살아 있을 사회적경제의 개략적인 모습이 구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개념에 기반해서 생명의 사회적경제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호혜·재분배·교역의 창조적 재융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은 지금 정리 단계에 있고, 기회가 닿으면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1. 교환의 세 가지 방식과 시장사회로의 진입

자연과 인간의 교환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무언가를 생산하고 교환하고 또 소비한다. 생산이란 결국 자연을 변형 가공해서 우리 삶에 유용한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는 행위이고, 이렇게 생산한 것을 인간은 서로 교환하고 소비하며, 최종적으로는 또 자연에게로 되돌린다. 자연으로부터 얻어서 자연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과 인간의 교환>이고, 서로가 생산한 것을 나누어 소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과 인간의 교환>이다. 인간의 삶이란 이렇게, 자연과 인간 사이의 주고받는 교환 이면서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주고받는 교환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자연과의 직접적 관계를 줄인 듯 보여도, 우리 삶은 여전히 자연에 깊이 의존해 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 관계를 줄인 듯 보여도, 우리 삶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 깊이 의존해 있다. 그리고 지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무리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부터 멀어져 있는 듯 보여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의존해 있다. 인간의 ‘실제적인’ 경제는 이렇게 <자연과 인간의 교환>에 기초한 <인간과 인간의 교환>인 것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그 모습을 처음 드러낸 이래로 수렵과 채집을 하며 생활해온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자신은 물론 자연에 대해서도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의 종에 지나지 않았다. 자연은 단지 먹이일 따름이었고, <자연과 인간의 교환>이 자연 안에 완전히 내포된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교환>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인간은 가족이나 친족 단위로 무리를 형성해왔고 인간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었다.

수백만 년을 이어온 이런 인간의 삶은,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해갔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급

격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빙하가 녹아 차가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갔고, 바닷물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일시적인 저온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수렵과 채집의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필요한 식량을 확보할 수 없게 했다. 해빙으로 인해 확보된 다량의 물을 비옥한 토지에 이용해 보다 많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농경의 발명은 수렵채집사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수렵과 채집을 위해 이동하던 사람들은 농사가 가능한 강 유역으로 모여들었고, 그 지역에서 인류는 이른바 ‘문명’이란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사에 필수적인 물과 농지와 노동력의 관리가 필요했다. 물론 이런 역할은 기후 변화와 농사 일정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졌다. 이른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지도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삼황오제(三皇五帝) 가운데 삼황에 속하는 복희씨·신농씨·여와씨는 모두 이런 격변기에 등장한 사람들이었다. 복희씨는 그물을 발명해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짐승 잡는 법을 가르쳤고, 신농씨는 나무를 잘라 구부려서 뇌사(호미)를 만들어 농사를 가르쳤으며, 이런 농경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여와씨에 이르러 비로소 인간이 창조될 수 있었던 것이다. 복희씨가 팔괘를 만들고 신농씨가 육십사효를 만들어 점을 쳤다는 것과, 신농씨가 시장을 세워 교역을 가르치고 치우가 풍백과 우사를 거느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모두 자연의 변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도층이 인간 사회를 다스리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겨난 새로운 지도층 덕분에 농경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식량의 생산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저장 또한 가능해졌다. 초기 농경사회의 지도층을 대변하는 삼황오제의 시기는, 오제(五帝)의 마지막을 장식한 요순(堯舜) 임금의 사례에서 보듯, 인간 사회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위지위(無爲之爲)의 덕(德)에 따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천 년을 이어온 무위정치는 기원전 2천년을 즈음해 최초의 세습왕조라 할 수 있는 하(夏) 나라에 이르러 서서히 지배와 강제의 정치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권력과 힘으로 백성들을 지배하고, 농경의 발달로 생긴 잉여생산물을 빼앗아 사치와 낭비를 위해 사용했

던 것이다.

농업혁명은 <자연과 인간의 교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인류의 사고에서 ‘자아’가 생겨나고, 이는 시간과 공간을 입체화시키면서 자연을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의 의식 속에서 자연은 단지 먹이의 차원을 넘어 먹이를 길러주는 어머니로 변화해갔고, 이런 자연의 속성(공간)과 흐름(시간)을 잘 따르기만 하면 아낌없이 먹이를 제공해주는 자애로운 분이 되었다.

물론 그런 자연도 가끔은 성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 자연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자연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질적인 것을 되돌렸을 때였다. 그리고 이럴 때 자연은 자애로운 어머니에서 성난 어머니로 변모했고, 그나마 지금까지 베풀어왔던 많은 것들마저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인간의 교환>을 균형 있게 유지시키는 것이야말로, 자애로운 어머니 품에서 살아가는 어린 아이 인류의 당연한 생존방식이었던 것이다.

농업혁명이 <자연과 인간의 교환>에 끼친 가장 큰 변화는, 먹이인 자연에서 먹이를 길러주는 자연으로 인류의 의식이 확장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수렵과 채집의 시대에 자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나 땅에서 솟는 젖처럼, 단지 먹이일 뿐이었다. 하지만 농경과 목축이 행해지면서 자연은, 먹이이면서 동시에 먹이를 길러주는 존재로 확장되었다. 먹이를 기르는 노동은 인간에 의해 행해지지만, 그런 인간의 생산 노동은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따르는 데서 발현되고, 노동 성과물은 궁극적으로 자연 노동의 성과이지 인간 노동의 성과가 아니었던 것이다. 자연의 순환과 자연의 노동에 의존해야만 그 성과와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는 이전과 다름이 없지만, 그런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에서는 이전과 차이가 있었다. 자연의 순환 안에 완전히 내포돼 있던 <자연과 인간의 교환>이 처음으로 자연 밖으로 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자연 밖으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 <자연과 인간의 교환>은, 19세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 수렵과 채집 시대에 먹이였던 자연이, 농업혁명을 기점으로 먹이이면서 동시에 먹이를 길러주는 어머니로 변했다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먹이로 전락한 것이다. 물론 수렵과 채집

시대의 먹이와 산업혁명 이후의 먹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것은 단지 먹이의 유형이 야생동물과 과일에서 광물자원으로 바뀐 것만이 아니었다. 전자의 먹이가 자연 안에 완전히 내포된 생물종 인류의 자연을 향한 균형 잡힌 되먹임 속에서 얻어진 결과였다면, 후자의 먹이는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유리된 인간의 자연을 향한 끝없는 수탈의 결과였다.

산업혁명이 자연에서 찾아낸 새로운 먹잇감은 석탄이나 철, 석유 같은 광물자원이었다. 그리고 이런 광물자원의 재고는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무한한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무한한 광물자원을 제공하는 자연은 ‘돌려받을 것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베푸는(無住相布施)’ 무기물이 되었고, 이에 기반한 인간의 경제 활동은 무한할 것이라는 믿음이 정착돼갔다.

이런 믿음을 과학으로 만든 것이 고전경제학이었다. 19세기에 태동한 경제학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특히 고전물리학의 열역학 제1법칙에 주목했다. 고전물리학의 “모든 에너지는 그 총량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없이 항상 일정하고” “저항이 없는 속에서 운동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개념은, 자연을 무한히 베푸는 에너지로 규정하고 그런 자연에 기반한 인간의 경제 활동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으로 확신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런 일방적 수탈은, 200여 년이 지난 지금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등으로 그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무한히 베풀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자연은 이제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자연이 수용할 수 없는 유형의 폐기물로 인해 자연은 죽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자연과 인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런 생각을 새로운 과학과 경제학이 지지해주었다.

기존의 경제학이 고전물리학의 열역학 제1법칙에 주목했다면, 새로운 경제학은 열역학 제2법칙에 주목했다. 그들에 따르면 자연은 두 가지 힘을 지닌 자연 자본(natural capital)이다. 하나는 태양 에너지의 일부를 이용 불가능한 자원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변환시키는 ‘생산력’ 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변환된 자원이 지구상 모든 생명의 활동을 통해 이용 불가능한 자원으로 바뀌지만 이를 다시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정화력’ 이다. 자연이 지니는 이 두 가지 생산력과 정화력의 합계를 그들은 자연의 ‘환경수용력’ 이라 했고, 그 범위를 넘어선 자

원의 과잉 소비와 폐기는 자원의 고갈과 오염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인간의 경제 활동은, 한마디로 <자연과 인간의 교환>에 기초한 <인간과 인간의 교환>이다. <자연과 인간의 교환>에서 자연은 무한정 베푸는 이고, 따라서 이런 자연에 기반한 인간의 경제 활동은 영속할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이고 과학이다. 인간의 경제 활동은 자연의 생산력과 정화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경제와 사회라야 '정상계' (steady system)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자연은, 산업 혁명 이래로 우리가 잘못 생각해왔던 무한히 베푸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존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베푸는 것만큼을 꼭 되돌려 받아야 하는 유상보시(有相布施)의 존재도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자연을 먹고 자란다. 동시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자연을 향해 되먹인다. <먹임-되먹임>의 균형적 관계는, 자연을 향한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 <먹임-되먹임>의 관계에서는 엄청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만큼 자연에게로 되돌려주지 못한다. 하나의 계(系, system)가 그 구성원에게 베푸는 것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항상적인 마이너스 구조임에도 구성원을 향해 지속적으로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속한 더 큰 계로부터 항상적 플러스의 베풀을 받기 때문이다.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를 받아 그 일부를 지구 안 생명의 생존에 필요한 먹이로 변환시키는 '생산력'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생명체를 향한 자연의 항상적 마이너스 구조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태양계의 무주상보시가 있음으로 해서 자연의 무주상보시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계와 그 계가 품은 구성원과의 관계는, 한 계 안의 구성원과 구성원과의 관계와는 다른 것이다.

자연은 정상계이다. 그리고 자연이 정상계일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을 향해 열린 '개방형 정상계' (steady-open system)이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한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주에 이르는 모든 공간은 서로 다른 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계들은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내포적이다. 개별적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계는 정상계이고, 내포적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계는 개방적이다. 그리고

계와 계 사이의 항상적 수지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한 계가 정상계일 수 있게 하는 요인은, 그 계를 내포한 더 큰 계를 향해 개방돼 있고, 더 큰 계에 의해 길러지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삶을 <자연과 인간의 교환>에 기초한 <인간과 인간의 교환>이라 했을 때 ‘기초한다’는 것의 두 의미가 여기에 있다. 인간과 인간의 교환은 자연과 인간의 교환과는 다른 계이지만 이를 향해 열려 있고, 이렇게 열려 있음으로 해서 자연의 인간에 대한 조건 없는 보시에 의한 인간 사회의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교환

위에서 나는 농업혁명이 <자연과 인간의 교환>에 끼친 큰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농업혁명은 자연의 순환 안에 완전히 내포돼 있던 <자연과 인간의 교환>을 처음으로 자연 밖으로 드러낸 대단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인간과 인간의 교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농업혁명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과 인간의 교환>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간과 인간의 교환>의 시작은, 먹이를 기르는 생산 노동과 이렇게 길러진 먹이를 나누는 교환 노동의 출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수렵과 채집의 시대에 노동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줍거나 땅에서 솟는 젓을 빠는 것처럼 소비 노동의 범주에 속했다. 그리고 이런 소비 노동의 대부분은 규모가 크든 작든 가정(household)을 범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농경과 목축이 행해지면서 소비 노동 안에서 먹이를 기르는 생산 노동이 특화돼 나오기 시작했고, 길러진 먹이를 필요에 따라 나누는 교환 노동도 서서히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생산과 교환 노동은 가정이 점차로 씨족·부족·국가로 그 범위를 확장해가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물론 생산과 교환은 모두 소비 즉 삶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었다. 하지만 농업혁명을 통해 자연 안에 완전히 내포돼 있던 인간의 삶이 <생산 : 교환 : 소비>로 분화해가고, 이에 따라 분화된 각 삶의 역할이 <생산 노동 : 교환 노동 : 소비 노동>으로 분업화해가면서, 각 노동은 <생산 노동=남 : 교환 노동=중성 :

소비 노동=여>라는 성별 분담 구조로 정착되었고, 나아가 생산과 소비를 잇는 교환 및 교환 노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교환이 생산과 소비를 지배하는 시장사회에서 모든 노동의 성격이 '성이 없는(genderless)' 노동으로 된 것은 교환노동의 이런 성격 때문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교환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행해져 왔다.

먼저 가족·혈연관계·지역공동체 내에서 우애·사랑·협동을 목적으로 대칭성과 쌍무성에 기초해 교환하는 호혜(reciprocity)가 있다. 호혜는 보통 대가를 바라지 않는 증여와 이에 대한 답례를 통해 이루어지고, 증여와 답례 사이의 지속적인 순환 구조는 의례와 관습에 의해 확보된다. 물론 이런 순환이 반드시 호혜 계(系) 내의 수지 균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호혜계 내의 순환은 경제적 가치에 의해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의 호의와 수령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비화폐적이고 상호부조적인 순환이 가능하기 위해, 호혜는 주로 대칭성이 확보되고 쌍무성이 유지되는 관계망 안에서 작동해왔다.

품앗이가 이런 호혜의 대표적인 사례다. 품을 주고받는 순환 과정은, 증여와 답례라는 일종의 의례이고 관습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품이라는 노동력은, 그것이 지니는 생산적 가치의 동등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공자의 호의와 수령자의 필요에 의해 평가된다. 물론 이런 경제적 부등가 교환에도 불구하고 품앗이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제도화된 의례와 관습을 공유하는 폐쇄계 안에서 호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교환 방식으로, 재분배(redistribution)가 있다. 재분배는, 국가가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의 일부를 국민을 위해 쓰는 것처럼, 평등과 공정을 목적으로 중심성(centricity)에 기초해 교환하는 행위로서, 의무적인 공물 또는 징수와 이를 다시 나누는 재분배 사이의 순환 구조다. 물론 이런 재분배의 지속성은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힘 또는 권력에 의해 확보된다.

호혜와 마찬가지로 재분배에서도 계 내의 수지 균형이 항상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중심으로 향한 경제적 가치의 총량과 비교해 중심에서 나오는 경제적 가치의 총량은 항상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형

의 인간 사회에서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재분배가 가능해왔던 이유는, 교환에 참여할 수 없는 약자들에 대해 배려함으로써 더 큰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자가 위정자들을 향해 ‘무릇 백성의 숫자가 적다고 우려할 일이 아니라 백성 간 평등하지 못함을 우려할 일이며, 무릇 백성이 가난함을 근심할 일이 아니라 백성이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할 일’¹⁾이라 한 것은, 이런 분배의 불공정에 따르는 사회적 불안과 재분배의 당위성을 강조한 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환 방식으로 교역(exchange)이 있다. 교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를 매개로 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다. 호혜가 의례와 관습에 의해, 재분배가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힘 또는 권력에 의해 그 순환 구조를 확보하는 데 비해, 교역은 익명적인 시장 시스템에 의해 순환 구조를 확보한다. 호혜와 재분배가 한 사회 내에서 상호 선의를 전제로 반대급부가 확정적이지 않아도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교환이라면, 교역은 화폐 척도로 반대급부가 확정되어야만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교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교환방식의 하나로서의 교역과 시장의 출현이 반드시 동시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시장에서의 교환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의 교환이 지금과 같은 교역, 즉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를 매개로 상품을 거래하는 형태로 변화한 것은 사실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시장에서의 교환은 반드시 상품과 화폐를 동반하고 나아가 그런 시장 없이는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가정은, 아래 호혜·재분배·교역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이해다.

호혜와 재분배의 등장

호혜·재분배·교역이라는 세 가지 교환 방식은 인류의 역사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그 사회의 필요에 따라 태동했다.

1)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인류는 오랜 동안 숲에서 가정을 단위로 수렵과 채집의 시간을 보내왔다. 그런 인류가 기원전 약 7,000년경 농경과 목축을 위해 숲에서 나와 가정의 확장적 제도인 씨족이나 부족 같은 무리(群集)를 이루어 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는 무리의 한 일원으로서 생산과 소비를 공동화해 자연에게서 먹이(feed)를 얻고 자연의 응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생활해왔다.

초창기 농경과 목축 사회는 자급자족에 가까웠기 때문에 외부와의 관계는 그리 빈번하지 않았다. 가끔 이루어지는 외부와의 관계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갈등과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 생산물을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맞교환하기 위해서였다. 이때의 시장은 씨족과 부족의 일상적 순환 범위를 뛰어넘는 씨족간 부족간 축제와 제사의 장이었고, 이때의 교환은 선물(贈物)의 증여와 답례를 통해 이루어졌다. 호혜가 출현하고, 호혜에 기반을 둔 대외적 시장(external market)이 탄생한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그 전형적인 예가 단군신화에 나오는 신시(神市)다. 신시는 환웅이 태백산에 세운 도시라 불리지만, 실은 신시의 '시(市)'는 도시가 아닌 시장이었다. 그것은 웅족(곰)이나 호족(호랑이) 같은 서로 다른 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다른 기후대에서 지리적으로 편재된 생산물을 평화적이고 쌍무적인 호혜를 통해 교환함으로써, 부족 간의 갈등과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일종의 축제이고 제사였다. 호혜에 기반한 신령스런 시장 안에서의 친교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교환 방식 가운데 호혜가 가장 먼저 생겨났고, 이런 호혜의 출현은 가정이나 공동체 내부가 아닌 그 외부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였다. 시장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만 형성됐고 이런 대외적 시장 또한 호혜에 의해 작동되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를 매개로 상품을 거래하는 교역과는 다른 시장이었다. 모든 생산과 소비는 공동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재분배 역시도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 노동생산물의 일부가 분배되지 않고 중앙에 쌓이기는 했지만, 이는 평등과 공정을 위한 재분배가 아니라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자연의 재앙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초창기 농경과 목축 사회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다. 기원전 약 2,000년 경 곡류의 재배와 가축의 사육에 높은 생산성을 과시하는 부족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런 부족 가운데 몇몇은 이웃하는 부족을 병합해서 국가를 형성해갔다.

국가의 등장은 오랫동안 생산과 소비를 공동화해온 기존의 씨족과 부족을 해체하고, 증대한 생산력과 분업을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의 주체를 개별 가정으로 분화시켰다. 이런 분화에 의해 공동체 내부에 개인 간 교환이 활성화됐고, 이는 다시 지금까지 대외적 교환에 한정돼 있던 호혜적 시장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 주역 계사하전(繫辭下傳)에 “한낮에 장이 서는데 천하의 사람들과 물건들이 이곳에 모이고, 서로 바꾸어 돌아가니 각자 그 필요한 바를 얻는다. 이는 대개 서합괘를 취한다”²⁾는 말이 있다. 대외적 시장에 이어 국지적 시장(local market)이 이때부터 탄생한 것이다.

국지적 시장은 대외적 시장과는 달랐지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시장은 아니었다. 대외적 시장이 의례나 관습에 의해 작동되는 축제와 제사의 장이었던 데 비해, 국지적 시장은 ‘가진 것’으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장이었다. 동시에 국지적 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익명의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지금의 시장과는 다르게, 만나절이면 올 수 있는 대면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레와 번개가 합치듯 제공과 필요를 맞춰 거래를 성사시키는 인격적 시장이었다. 이런 국지적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장’이라는 이름으로 18세기까지 무려 1천여 개나 이르렀다.

한편 증가한 농업생산성으로 이웃하는 부족을 병합해 새로이 등장한 국가는, 이제까지 공동체와 공동체 간 호혜를 통한 대외적 시장을 재분배 방식으로 크게 변화시켰다. 부족의 점유물로 수만 년 동안 이어져온 토지와 노동력은 국가 소유물로 이관됐고, 이런 제도를 토대로 국가는 토지와 노동력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동체와 공동체 간 대외적 교역에 대해서는 전매와 화폐의 발행을 통해 통제해갔다. 불평등의 해소와 외침에 대한 대비의 명목으로, 징세·전매·화폐의 발행을 통해 국가의 재분배 행위가 제도화된 것이다.

징세는 본래 자연의 보시에 감사하는 공물(供物)과 자연의 응징에 대처하는 구

2) 日中爲市 致天下之民 聚天下之貨 交易而退 各得其所 蓋取諸噬嗑

휙(救恤)로부터 유래한 것이었다. 하지만 국가의 탄생으로 그것은 토지와 노동력의 이용자가 그 소유자에게 납부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 바뀌었고, 토지와 노동력에 대한 징세는 점차 특정 물품³⁾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전매는 본래 씨족 혹은 부족 단위로 공동생산한 결과물의 공동 교환권(交換權)이었다. 하지만 고조선과의 전쟁으로 국고를 탕진한 한나라가 그 세수를 충당할 목적으로 농기구 제조를 위해 쓰던 모든 철의 생산·제련·제조·유통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전매는 세수 증대와 공동체 경제 통제의 수단으로 변모해갔다. 여기에 더해 국가는, 민간의 신용과 일반적 가격물—일명 물품화폐라 불리는—을 매개로 한 교역을 권력의 언어와 주조화폐로 대체시켜 교환 전반에 대한 자신의 통제를 강화해갔다.

징세·전매·화폐 발행에 대해 당시의 지식인들은 통렬히 반대했다. 기원전 81년에 간행된 국가 정책 토론회 보고서 『염철론(鹽鐵論)』에 따르면, 유가(儒家)들은 당시 정책담당자들을 향해 징세는 생산하지도 않는 물건을 싼값으로 거둬들여 농민들의 고통을 몇 배로 늘리고, 전매는 조정이 이익의 독점과 제품의 획일화를 강요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의 하락과 소박한 기풍의 소멸을 초래하며, 화폐의 발행은 화폐 내 담긴 실가치와 표시가치 사이의 차이로 인해 가짜 화폐가 기승을 부리게 하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징세·전매·화폐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매우 명료했다. 징세는 백성들의 특산품을 모았다가 나누기 위한 것, 즉 자원의 지리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소금과 철 등은 지역 상황에 맞게 백성들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관리해야 한다. 화폐는 백성들이 자유롭게 제조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상호간 신뢰 구축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백성의 이런 자율적 경제 행위를 조장하는 데 있다. 그렇지 않고 국가가 오히려 사리사욕을 위해 이를 탄압해서는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곤궁에 빠질 뿐이다.

하지만 재분배의 본래적 의미를 역설한 유가들의 이런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혜에 기반을 둔 공동체간 대외적 시장은 국가에 의한 재분배 방식

3) 최초의 물품세는 소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진시황제는 북방 오랑캐의 침략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리장성 축조라는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벌였고, 이에 동원된 100만 노역자의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 소금에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다.

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고, 이제 호혜적 교환은 그 형태를 달리해 대외적 시장에서 국지적 시장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교역의 등장

재분배가 호혜를 대신해 대외적 시장의 교환 방식으로 자리하면서 국가의 기능은 더욱 강화됐고, 그 중심지인 도시도 점차 활기를 띠어가기 시작했다. 당시 도시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산품의 제조지라는 기능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가 지배하는 교역물의 교환지라는 기능이었다. 이런 기능을 가진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장인이나 상인과 같은 생업에서 직업으로 노동의 분화가 일어났고, 분화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물품은 도시에서 화폐를 매개로 거래되면서 다시 도시를 활성화시켰다.

도시는 대외적 시장이 국가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당연히 재분배의 교환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도시의 장인이나 상인들은 교환을 위해 생산하거나 실제 교환을 담당했지만, 그 교환은 국가에 의해 구획된 범위와 통제된 수단을 통해서만 행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도시라 할지라도 그 내부적으로는 농촌과 마찬가지로 호혜의 교환 방식이 주도하는 사회였다. 생산에서 장인들은 길드와 같은 동업자조합을 만들었고, 교환에서 상인들 또한 경강상인·개성상인·의주상인·동래상인 등과 같은 동업자조합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한마디로 이 시기는 비록 국가에 의해 도시가 형성되기는 했어도, 도시든 농촌이든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호혜의 교환 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 사회가 외부와 관계할 때만 재분배에 예속된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봉건사회 도시의 구획된 경제 범위와 대내외의 차별적 교환 방식은, 근대사회에 들어 자본이 시장을 지배하고 나아가 그런 시장이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를 포섭해 들어가면서 크게 변모해갔다. 기존의 <도시 : 농촌>, <대외적 시장 : 국지적 시장>, <내부적 호혜 : 외부적 재분배>의 분할 경제 체제는, 자본이 지배하는 전국적 통일 시장과 이를 옹호하는 국가 권력에 의해 <교역(자본)=재분배(국가)>의 단일 경제 체제로 변화해갔다. 호혜와 재분배에 이어 교역

이 발생하고, 대외적 시장과 국지적 시장에 이어 국내 시장(national market)이 태동한 것이다.

우리는 보통 시장의 변화에 대해, 국지적 시장이 국내 시장을 낳고 그것이 다시 세계 시장으로 확대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확대 과정이 교역과 화폐의 발달 과정과 일치한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태동은 먼저 대외적 시장으로부터이고, 교환은 먼저 외부와의 관계로부터 대외적 시장의 작동원리가 호혜에서 재분배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교환의 종사자는 이윤 동기보다 신분에 따라 정해진 상인들이었고, 교환의 장소는 정치적 중립지이거나 사절 등과 같은 의례 안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이제까지의 시장과는 달리 국내 시장에서의 교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를 매개로 상품을 교환하는 것이었다. 대외적 시장이 자원의 지리적 편재를 극복하고 국지적 시장이 분업에 따른 노동생산물의 교환에 그 목적이 있었다면, 국내 시장은 본질적으로 영리 즉 교환가치를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대외적 시장과 국지적 시장이 ‘가진 것’으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것이었다면, 국내 시장은 ‘팔기 위해 생산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자기 노동력의 일부를 상품으로 내놔야 하는 ‘자기희생(self-sacrifice)’을 치르는 관계였다. 그리고 이런 국내 시장에서의 교역은 화폐가 지니는 지배력 강화와 기능의 확장을 통해 제도화됐다.

화폐는 본래 언어·문자·도량형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의미 공유 시스템이었다. 문자가 출현하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계(契)·탈리(tally)·결승(結繩) 등의 방식으로 교환의 내용을 공유해왔다. 당시의 화폐가 지녔던 역할은 교환의 내용을 기록하는 데 있었고, 이런 기록에 기초해 실제 교환은 수혜자의 필요와 공급자의 의례 혹은 능력에 따라 성사되었다. 노자(老子)가 결승(結繩)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 이유가 이때의 화폐야말로 화폐의 본래적 기능인 지불 수단이고, 더욱이 이 지불 관계를 대칭적이고 쌍무적인 것으로 강화시키는 매개물이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출현하고 문자와 도량형이 통일되면서 국가 주도 화폐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는 국가의 강제력이 미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될 뿐, 대외적

시장과 국지적 시장에서 교환의 주요한 수단은 의미 공유 시스템을 실체화시킨 곡물·가축·베·노예 등과 같은 다양한 일반적 매개물이었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 매개물의 역할은 계·텔리·결승 등의 지불 수단을 넘어 교환 수단으로 확장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개물의 기능을 넘지 않았다. 교환을 성사시키는 등가는, 여전히 화폐 환산 가치와 상관없는 수혜자와 공급자의 필요와 마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외적 시장과 국지적 시장에 이은 국내 시장의 형성은, 화폐의 형태를 다양한 일반적 매개물에서 통일된 일반적 등가물로 전환시켰다. 더욱이 이런 화폐가 일반적 매개물이 지녔던 지불 수단과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가치 척도와 저장 수단으로까지 확대돼갔고, 교환을 성사시키는 등가는 화폐 가치로 평가될 반대급부에 의해 확정되었다. 더 많은 화폐 가치를 낳아야만 교환이 성사된다는 것은, 교환이 화폐의 자기증식 과정 즉 자본의 운동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국내 시장의 형성은 대외적 시장과 국지적 시장을 국내 시장으로 통합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호혜와 재분배라는 다른 교환 방식을 교역 아래로 위계화시켜갔다. 팔기 위해 생산한 것을 구입해야만 생활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자기 노동력의 일부를 상품으로 판매해야만 했고, 이는 도시와 농촌의 내부적 호혜 관계를 자본에 의한 고용 관계로 대체시켰다. 대외적 교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의 재분배 방식은 자본의 교역 방식 뒤로 나앉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그 대가로 국가는 막대한 국부와 권력의 영속성을 보장받는 듯했다. 호혜는 전근대적인 교환 방식으로 폼뒤편에 가정의 사적 의미인 가족에 한정되었고, 재분배는 교역의 영구적인 제도적 보장을 위한 호위 무사로 전략해갔다.

2. 시장사회의 도래와 사회적경제를 통한 방위

시장사회의 출현과 특징

인간과 인간의 교환은 이렇게 호혜·재분배·교역의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호혜는 우애·사랑·협동을 목적으로 대칭성과 쌍무성에 기초한 교환이고, 재분배는 평등과 공정을 목적으로 중심성(centricity)에 기초한 교환이며, 교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익명적인 시장 시스템에 기초한 교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는, 크든 작든 이런 세 가지 교환 방식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주된 교환 방식으로 채택하면서 나머지 두 교환 방식을 결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주된 교환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 사회는 다음의 세 가지 경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족·혈연관계·지역공동체에서처럼 호혜의 교환 방식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동체 경제(community economy)>가 있다. 여기서의 교환은 증여와 답례라는 상호부조적이고 비화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구속된다. 다음으로 국가가 세금을 걷고 걷은 세금의 일부를 백성들을 위해 쓰는 것처럼, 재분배의 교환 방식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state economy)>가 있다. 여기서 인간은 국가에 의해 착취와 지배를 당하지만, 한편에서는 부의 일부를 재분배 받음으로써 보호받는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교역의 교환 방식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장 경제(market economy)>가 있다. 여기서 인간은 공동체나 국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거래 당사자가 되지만, 그 과정에서 잉여가치의 창출과 빈부의 격차가 발생한다.

실체로서의 경제는 자연과 인간의 교환에 기초한 인간과 인간의 교환이다. 그리고 이런 교환과 그것의 제도화가 곧 사회다. 우리 사회는 대칭적이고 쌍무적인 호혜에 기초한 공동체 경제, 중심으로 향했다가 다시 중심에서 나오는 재분배에 기초한 국가 경제, 시장에서의 익명적이고 자발적인 교역에 기초한 시장 경제라

는 세 가지 경제의 복합체다. 물론 공동체·국가·시장이라는 각각 경제 주체는, 호혜·재분배·교역이라는 주된 교환 방식에 기초해 나머지 교환 방식을 융합시킴으로써 존재한다.

시장은 한 사회 안에서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로부터 생겨났다. 고대사회에서 시장은 외부와의 친교를 위해 생겨났고, 중세사회에서 시장은 필요의 충족을 위해 생겨났으며, 현대사회에서 시장은 자본의 증식을 위해 생겨났다.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는 한, 시장은 존재해왔다. 그렇다고 시장이 곧 사회는 아니었다. 사회는 시장 영역과 비시장 영역이 구분돼 있었고, 시장에서의 교환 또한 오랫동안 호혜나 재분배에 의해 관리돼 왔으며, 따라서 시장은 대외교역과 대내교역, 대내시장과 대외시장, 대외화폐와 대내화폐로 나뉘어 공존해왔다.

시장의 융성기라 불리는 중상주의 시대에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중상주의 시대는 본질적으로 시장 경제가 주도한 사회라기보다는 대외적 시장과 대내적 시장이 분리된 속에서 도시의 제한적 기능이 확대된 시대였다. 비록 도시에서의 시장이 그 영역을 확대하고 그 기능을 확장시키기는 했지만, 당시의 시장 경제는 여전히 국가 경제와 공동체 경제를 포함한 사회의 한 구성 요소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시장 경제는 다른 경제와 함께 사회 안에 내포된(embedded) 것이었다. 비록 시장 경제가 비사회적 교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호혜의 공동체 경제나 재분배의 국가 경제 같은 사회적 교환과 함께 사회 안에 내포돼 있는 한, 시장에서의 교역은 호혜와 재분배 같은 다른 교환 방식과 함께 공존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공존 관계는 국내 시장이 세계 각지에 출현하고, 국내 시장이 다시 세계를 포괄하는 세계 시장으로 확장해가면서 크게 와해됐다. 이제까지 호혜에 의해 작동되고 재분배에 의해 관리되는 비경쟁적이고 사회적이었던 국지적 시장과 대외적 시장은, 국가의 강력한 보호 속에 익명의 시장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경쟁적이고 비사회적인 국내 시장과 세계 시장으로 흡수돼갔다. 사회적 필요의 충족이라는 시장의 목적은 자본의 증식으로 변모해갔고, 사회적 규범에 따라 작동됐던 시장의 기능은 시장의 자기조정(self-regulation)으로 변화해갔다. 시장 경제가 사회 안에 내포된 국지적이고 제한적이며 공존적인 경제 체제에서

들출해(dis-embedded),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시장사회(market society)를 낳은 것이다.

〈참조1〉 공적 부문·사적 부문·제3부문

공동체·국가·시장의 분류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공적 부문(public sector)>·<사적 부문(private sector)>·<제3부문(the third sector)>이 있다. 이는 경제행위의 주체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 목적에 따라 영역을 구분한 것으로, <공적 부문=공익성(公益性)>·<사적 부문=사익성(私益性)>·<제3부문=비영리성(非營利性)>으로 정식화되기도 한다. 공적 부문은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적 부문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제3부문은 나든 모두든 ‘이익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의 이런 분류 방식은 실은 미국 사회 나름의 역사적 전통에 기인한 바가 크다. 미국은 아무도 없는 신대륙에 –실은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이 있었지만 도래인들은 그들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다– 개개인들이 들어와 만든 신생국이다. 그들은 사적 이익의 추구를 자유인의 당연한 행동일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동력이라 여겼고, 공적(public)이란 이런 자유인의 복수형(公衆, publicus)일 뿐이었다. 때문에 공적 부문을 대표하는 국가(state) 역시도 이런 개인들의 다양한 결사체 가운데 하나였으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이런 결사체들이 연합한 또 하나의 결사체(united states)로 보았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미국 사회에서의 국가는 수천 년 동안 체제를 구축해온 우리 사회에서의 국가와는 다르며,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에서의 공적 부문은 ‘모두의 이익’(公益性)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익’(共益性)을 추구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의 하나로 국가를 만들었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영리추구 활동이 기본인 사회에서는 개인의 경제행위가 우리의 이익에 배치될 때만 국가의 역할과 활동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봐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나의 이익 : 우리의 이익>이라는 구분 방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개인의 자유로운 결사체였던 국가가 하나의 체제로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를 포함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나아가 모두의 이익은커녕 오히려 자본의 이익에만 경도돼갔던 것이다. 이런 국가의 변화로 인해 진정으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주체가 필요하게 되었고, 기존의 공적 부문에 포함되지 않았던 불런티어 활동에 그 뿌리를 둔 새로운 유형의 조직이 현대사회에 들어 <모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사회적 기업)>이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비영리단체, NPO)>라는 기존의

분류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지대를 형성해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제3지대의 경제 활동들에 대해 국가 자체를 하나의 결사체로 여기고 사회 자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여겨왔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공동체·국가·시장의 분류 방식이 아닌 공적 부문·사적 부문·제3부문의 분류 방식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통용되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적 부문과 ‘나’의 이익을 위한 사적 부문, 그리고 ‘이익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 제3부문이라는 분류 방식은 두 가지 점에서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하나는 영역과 그 영역이 지니는 목적의 불일치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목적의 비현실성이다. 공적 부문이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적 부문이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제3부문이 ‘이익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이 사회를 지배해가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모두’로 추상화시킴으로써 구체성을 상실하게 하고, 경제 주체의 행위를 이윤추구 동기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이익 쟁탈의 전장으로 끌고가며, 새롭게 발흥하는 제3지대의 역할을 비화폐적 영역으로 한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로부터 돌출한 시장사회의 특성에 대해,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인간과 경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시장 경제가 사회 안에 내포돼 있었을 때, 인간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종교나 관습에 의존해 행동하는 존재였고, 따라서 이런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행동과 사적 이익의 추구는 일종의 죄악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시장 경제가 사회로부터 돌출해 시장사회를 낳으면서, 인간과 경제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졌다. 인간은 더 이상 공동체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이 되었고, 따라서 그 행동은 배려·헌신·순응 등과 같은 공동체적 규범이 아닌 근면·절약·인내 등과 같은 개인적 덕성에 따르는 것이 되었으며, 이런 행동을 통해 확보된 사적 이익은 죄악이 아니라 미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일명 프로테스탄티즘이라 불리는 이런 새로운 인간과 경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시장사회를 보장하는 정신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시장사회가 지니는 두 번째 특성은, 그것의 정신적 토대가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 마련되었다면, 그 물질 토대는 자본주의를 통해 마련됐다는 점이다. 화폐가 자본이 되는 과정은, 시장 경제가 국가 경제로부터 분리돼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물질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사회의 또 다른 특성이다.

고대사회에서 인간은 계·탈리·결승 등과 같은 의미 공유 시스템으로서의 화폐를 통해 교환의 내용을 기록하고 공유해왔다. 이런 화폐는 증여와 답례의 순환을 기록하는 채권과 채무의 지불 수단이었으며, 일종의 민간 신용이었다. 봉건사회에 들어 인간은 기존의 의미 공유 시스템과 함께 곡물·가축·베·노예 등과 같은 다양한 일반적 매개물을 화폐로 사용했고, 이를 통해 처음으로 지불 수단을 넘어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화폐 안에 담아왔다.

하지만 대외적 시장과 국지적 시장에 이어 국내 시장이 형성되면서 화폐의 형태는 다양한 일반적 매개물에서 통일된 국가 주조 화폐로 전환됐고, 화폐의 기능에 지불과 교환 수단을 넘어 새로이 가치 척도와 저장 수단이 태동했다. 그리고 이런 화폐는 국내 시장이 세계 시장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다시 신용 일반을 탄생시켰고, 화폐의 기능에 지불·교환·저장을 넘어서는 가치의 증식을 새로이 추가시켰다. 시장 경제가 사회로부터 돌출해 사회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렇게 화폐가 자본이 되고 그런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이 형성된 때문이었다.

자본의 초창기 자기증식은 〈화폐 → 상품 → 화폐〉로 이어지는 상업자본에 의해 주도됐다. 하지만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달과 중화학공업의 성장은 자본 증식의 방식을 〈화폐 → 상품 → 생산 → 상품 → 화폐〉로 이어지는 산업자본으로 이관시켰고, 전지구적으로 생산과 교역이 통일된 현대에 이르러 산업자본은 다시 〈화폐 → 화폐〉로 이어지는 투기자본으로 변모해갔다. 지금 자본의 대부분은 무역이나 제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투기적 파생상품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사회가 지니는 세 번째 특성은, 시장이 국가와 공동체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점이다.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가 시장의 토대가 되기는 하지만, 그런 시장이 국가나 공동체와는 별도의 영역에 구획돼 있을 때, 따라서 시장에서 교환되는 상품과 시장에서 교환될 수 없는 비상품이 구분돼 있을 때, 시장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시장사회는 출현하지 않는다. 시장이 국가와 공동체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시장사회가 된 것은, 상품화할 수 없는 국가와 공동체의 제요소를 상품화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상품은 시장에서 사고팔기 위해 인간이 생산해낸 물건과 서비스다. 그런 면에서 생산의 본원적 요소인 토지·노동력·신용(자본)은, 시장에 팔기 위해 인간이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 시장에 팔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보다 더 확장적인 의미로 볼 때, 토지는 자연이고 노동은 인간이며 신용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다. 자연과 인간과 인간관계는 팔려고 생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본원적 요소이며, 국가와 공동체 같은 모든 인간 사회 또한 이런 요소들로 구성된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에 의해 형성된 시장사회는, 시장에 팔기 위해 생산한 상품이 아님에도 이런 요소들을 상품화시켜 실제 상품보다 더 많이 판매하고 있다. 이런 허구상품(fictitious commodities)의 등장은 단지 상품군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과 인간관계의 상품화를 의미하고, 이를 통한 시장의 국가와 공동체 지배를 의미한다. 시장사회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를 토대로 생겨났지만, 허구상품의 상품화를 통해 비로소 한 사회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포 → 의존 → 분리 → 지배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 생활해왔다.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해온 인간의 삶은 자연의 순환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었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교환은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순환에 전적으로 내포돼 있었고, 인간과 인간의 교환 또한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었고, 자아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인간은 그저 인류일 따름이었다.

기원전 7,000년경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자연과 인간의 교환이 자연의 순환 밖으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 인간이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그 무리의 안팎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환이 시작되었다. 물론 이런 인간과 인간의 교환은 자연과 인간의 교환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인간의 교환 또한 자연의 순환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대전

제하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거스르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은, 완전히 내포돼 존재하지 않은 것과는 사뭇 달랐다. 인류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교환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자연의 순환 구조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새로이 출현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환도 그런 자연과 인간의 교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시간과 공간을 인지하고 자아를 발견했지만, 그 자아는 무리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안에 내포돼 있었고, 그런 인간 사회는 또 대자연 안에 내포돼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인간의 무리로부터 차츰 지배계급이 형성되면서 국가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출현으로 기존의 무리는 더 이상 무리일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무리는 공동체로 변화해갔다. 무리로부터 태동한 국가는 처음에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호혜적 교환 방식을 조장하는 데서 자신의 역할을 찾았다. 하지만 국가의 성장은 이제까지 공동체에 의존해왔던 자신을 점차 공동체 밖으로 분리시켰고, 분리된 자신의 권력으로 공동체를 지배해갔다. 국가와 공동체 사이의 이런 분리와 지배의 과정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교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고 그런 자연의 순환에 의존해 자연과 인간의 교환을 제어하기 위해 발견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사유는, 인간과 인간의 교환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문자·도량형·화폐·법령 등의 제도에 구속됐고, 이에 따라 점차 자연과 인간의 교환 또한 자연의 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인간과 인간의 교환을 국가가 지배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은 매우 컸다. 대외적 시장은 그 담당자가 상인들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국가에 의해 지배받았고, 국지적 시장은 백성의 자율적 경제 행위였지만 그런 시장 간의 교환 또한 국가에 의해 공인된 사람들이 맡아 진행했다. 시장은 국가에 의존하게 되었고,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대가로 국가는 막대한 부를 챙겨갔다.

하지만 시장이 통일적 국내 시장을 형성하고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세계로 확장돼가는 과정에서, 시장은 국가의 의존에서 벗어나 자신을 분리해갔고, 이런 분리는 인간(노동)과 인간관계(신용)까지도 상품화하면서 마침내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시장의 지배를 완성해갔다. 시장사회의 출현으로 기존의 국가와 공동체는 더 이상 기존의 국가와 공동체로 남을 수 없게 됐다. 국가는 나라(state)에서 국민국가(nation-state)로 변화해갔고, 공동체는 공동체(community)에서 사회

(society)로 변화해갔다.

인간과 인간의 교환에서의 시장의 지배는, 자연과 인간의 교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통일된 국내 시장은 자연과 인간의 교환로부터 인간과 인간의 교환을 분리시켜갔고, 마침내 자연(토지) 자체를 상품화시킴으로써 자연에 대한 시장의 지배를 완성해갔다. 시장의 국내적 통일과 세계적 확장이 나라를 국민국가로, 공동체를 사회로, 자연을 착취 대상인 무기물로 전락시킨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자연·공동체·국가·시장 사이의 관계가 내포(inclusion)에서 의존(dependence)으로, 의존에서 분리(separation)로, 분리에서 다시 지배(regulation)로 향해 간 역사라 할 수 있다. 자연에 내포돼 있던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나오고, 인간의 무리에 내포돼 있던 국가가 무리로부터 나오며, 국가에 내포돼 있던 시장이 국가로부터 나왔다. 물론 초기에는 인간은 자연에, 국가는 공동체에, 시장은 국가에 의존해 있었다. 하지만 돌출한 것들이 힘을 얻으면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돼 자연을 지배해갔고, 국가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돼 공동체를 지배해갔으며, 시장은 국가로부터 분리돼 국가를 지배해갔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국가와 공동체와 자연을 지배하는 시장은,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가 지배하는(self-regulation) 신이 되었던 것이다.

시장사회의 위기, 사회의 방위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이 산업혁명과 시장의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를 포섭하고 공동체를 파괴해가는 상황에서, 같은 사회적 교환에 해당하는 국가 경제와 공동체 경제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국가 경제에 의한 정치적 경제의 등장이 그 하나이고, 공동체 경제에 의한 사회적경제의 등장이 또 다른 하나다.

시장이 요구하는 시장 경제에 대한 국가 경제의 태도는, 처음에는 시장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따라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자유주의에 기초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자유주의적 관점이 실제 적용되고 또 성공한 나라는 몇몇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시장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운영됐고, 상대적으로 시장 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조차도 외국의 상품으로부터

터 자국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보호주의적 수단을 꺼내들었다. 시장 경제란 결국 국가 경제의 통제와 보호 속에 육성돼온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통제와 보호 속에 성장한 시장 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물리적 통제와 보호로부터 벗어나 세계를 향해 더욱 빠른 속도로 확장돼갔고, 이 과정에서 일대 참사가 세계를 휩쓸었다. 바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것이다. 세계공황은 미국과 유럽은 물론 전 세계 경제를 깊은 불황의 늪에 빠트렸고, 경제 불황에 따른 사회통합의 위기에 대해 많은 나라들은 이제는 힘을 잃은 국가 경제 대신해 새로운 유형인 정치적 경제에서 그 출구전략을 찾았다. 이는 기존에 시장 경제를 통제하고 보호해오던 국가 경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고, 인간을 통째로 갈아서 무차별의 떼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시장사회라는 ‘사탄의 맷돌(satanic mill)’로부터 ‘사회를 방위(social protection)’하려는 ‘사회적 대항운동(social counter-movement)’의 일환이었다.

그들이 찾은 출구전략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관점과 달리,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과 유효수요를 창출하자는 케인즈적 발상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지만 냉정히 볼 때 케인즈의 발상은 사실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경제적 평등 없이 정치적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의 주장은 고전 경제학에 묻혀 오랫동안 잊혀오다가 대공황 이후 오히려 시장사회를 이끌었던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적극적으로 채택됐던 것이다. 하지만 케인지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공황을 극복하고 사회 방위에 성공한 것은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구소련의 스탈린주의, 일본의 군국주의였다. 그들의 공통점은 익명적 시장 시스템을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였고, <시장=국가>가 됨으로써 국민을 동원하기에 훨씬 수월한 면이 있었다.

국가사회주의 같은 획기적 방식을 취하든 케인즈주의 같은 점진적 방식을 취하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사회 방위 정책을 통해 시장사회를 대신하는 복합사회가 도래할지 모른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식민지를 지닌 제국들은 신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해 금본위제에서 이탈했고, 높은 관세 장벽과 통화 공유를 통해 식민지 경제를 블록화시켰다. 이에 비해 식민지를 지니지 못한 나라들은 자국 내 경제공황을 전체주의

적 통제로 극복해갔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제국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세계는 또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갔고, 수백만의 목숨이 세계 제국을 향한 정치적 경제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시장사회의 사회 지배와 이에 따른 사회통합의 위기에 대해, 정치적 경제를 강화해서는 사회통합은커녕 오히려 사회를 파국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전쟁의 상흔을 통해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국내시장이 대외적 시장과 국지적 시장을 포섭하고 나아가 세계를 향해 확장돼가는 속에서, 사회를 방위하려는 또 하나의 노력이 공동체 경제 내부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태동하기 시작했다.

사회적경제는 기존의 공동체 경제에 기반하면서도, 이를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롭게 회복하는 모색으로 추진되었다. 사회적경제는 공동체 경제와 마찬가지로 호혜의 교환 방식에 기초했고, 따라서 우애·사랑·협동을 목적으로 대칭성과 쌍무성에 기초한 상호부조적인 경제 행위였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는 시장 경제에 의해 이미 해체된 공동체 경제와는 그 출발이 달랐다. 공동체 경제에서 그 주체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었던 데 비해, 사회적경제에서 그것은 누구든 경제행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이었다. 공동체 경제에서 우애와 협동이 제도화된 관습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던 데 비해, 사회적경제에서 그것은 필요를 공유하는 이들의 평등한 ‘결속’이었다. 이는 모르는 사람과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시장 경제의 익명성을 공동체 경제의 호혜 안에 접목시킴으로써, 호혜의 폐쇄성을 개방적으로 탈바꿈시킨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유럽에서의 사회적경제는 19세기 영국에서 처음으로 태동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 경제가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를 포섭해 들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유입된 시기였다. 물론 도시로 유입된 사람들의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은 매우 열악했다. 자동화한 기계는 숙련된 장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갔고, 새로이 유입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감수해야만 했다. 주택과 위생 문제 또한 심각한 지경이었고, 조악한 식품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영양실조에 빠뜨렸다.

이런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조합 결성이 위법인 상황에서 그들의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그들은 생산과정에서의 자기 방어 운동에서 유통과정에서의 자기 방어 운동으로 방향을 돌렸고, 17세기부터 이어져온 장인들 간의 상호부조 조직(Friendly Society)의 전통을 이어받아 소비조합을 설립해 들어갔다.

영국에서 소비조합이 성공해갈 즈음, 프랑스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과 상호부조 조직이, 그리고 독일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의 유형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산업혁명의 후발국가에서 영국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및 생활상은 아직은 바다 건너 먼 이야기였다. 노동자 계급이 채 형성되지 않고 소규모 자영 농가들과 길드 장인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그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오히려 물밀듯이 들어오는 앞선 영국 상품에 맞서는 것이었다. 태생적으로 자립적이고 조직에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던 그들은, 자신의 개별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공장제 기계공업의 상품과 경쟁해 이길 수 있는 자본의 조성과 생산의 협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면하는 생활상의 다양한 위험 요소들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태동한 영국의 소비조합, 프랑스의 노동자협동조합과 상호부조 조직, 독일의 신용협동조합 등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경제성과 민주주의의 확산 과정에서 중산층 임노동자의 호응을 얻어 큰 규모로 발전해갔다. 1970년대까지 유럽의 중산층 노동자들은 생산에서는 노동조합을, 유통과 소비에서는 협동조합을 규모화시킴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재등장

하지만 이렇게 성장을 구가하던 사회적경제 진영에도 시련은 찾아왔다. 1980년대 들어 철강·조선·석탄 등과 같은 유럽의 전통적인 산업이 오일쇼크로 인해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도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자동차와 가전 등의 새로운 산업도 내수 침체와 세계적 경쟁 구조 속에서 극심한 구조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의 침체와 불황이 노동자들을 엄습해왔고, 일자리를 잃는 대량실업 사태가 불 보듯 뻔했다.

물론 지금까지는 산업별로 조직된 강력한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잘 지켜왔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은 산업화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들은 파이의 분배에만 힘을 쏟아왔지 파이의 생산에는 경험이 없었던 것이다.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동종간 협동은 잘 이루어왔지만, 노동자의 새로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이종간 파트너십은 발휘하지 못했다. 그들 역시도 파이의 유통과 소비에는 능했어도 파이의 생산과 재분배에는 경험이 없었던 것이다.

정부에 기대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었다. 하지만 유럽은 이미 19세기에든 똑같은 상황을 겪은 바 있었고, 이때의 경험에서 그들은 정치적 경제를 통한 사회통합이 사회를 오히려 파국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더욱이 지금은 실업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이상의 재정 지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부터도 비난받는 상황이었다. 19세기 정치적 경제의 강화를 통한 해결과는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이 사회적경제였다.

시장 경제와는 다르면서도 오랜 역사와 성공을 구가해온 사회적경제에 대해 지금 유럽은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방향에서 사회적경제가 역할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사회적경제(the new social economy)의 역할은 크게 새로운 활동 영역, 새로운 주체, 새로운 활동 공간이라는 세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새로운 활동 영역을 향한 사회적경제에 거는 기대에 대해서다. 이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일궈온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생산 과정과 재분배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생산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에 기대하는 새로운 역할은, 역사적으로 초창기 사회적경제가 시도했다가 대부분 소멸돼버린 노동자협동조합을 다시금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경험에 기초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산한 기업을 노동자들이 인수하거나 노동자 스스로가 사업체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시도들과 연대하는 것이다. 재분배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에 기대하는 새로운 역할은, 생산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는 초기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주창됐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했던 뉴하모니·팔랑스테르 같은 협동체를 다시금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경험에 기초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포섭과 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주체 형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에 거는 기대에 대해서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경제가 지녀온 중산층 노동자를 향한 폐쇄적 진영 논리로는 위에서 제시된 새로운 활동 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회적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중산층 노동자의 토대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그 주체를 새로이 확립하지 않고는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새로운 필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대의 경제(solidarity economy)라 불리는 새로운 대안 경제운동이 생겨나 사회적경제와 대립하던 때가 있었다. 그들은 기존의 제도화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중산층 조합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체제 순응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조직이라 비판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아동이나 고령자를 위한 복지 등과 같은 새로운 필요에 대응해 사업들을 펼쳤고, 이는 구체적으로 이제까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노동통합·대안금융·지역화폐·공정무역 등의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에 거는 기대는,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주체가 활동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의 구축이다. 이는 한마디로 기존의 사회적경제가 진영 논리에 갇혀 전국단위로 규모화하고 나아가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시켜온 데 비해, 앞으로의 사회적경제는 서로 다른 유형 간 지역 내 연대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다. 여기에 21세기 통합국가를 향한 유럽연합의 숨겨진 전략적 모델이 있다.

유럽연합이 인정한 사회적경제의 잠재력은 ‘혁신적(innovation)’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새로운 필요에 대한 대응이고, 그 대응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다. 이제까지 국가나 시장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왔던 새로운 필요에 대해, 사회적경제는 혁신적으로 응대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촉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앞에서 나는 사회적경제의 특징을 공동체 경제의 호혜성에 기반하면서도 시장 경제의 익명성을 개방성으로 탈바꿈시킨 데 있다고 언급했다. 물론 이런 사회적 경제의 개방적 호혜성은 지역을 활동 공간으로 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할 때, 사회적경제는 비로소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과 이를 구체화시킬 새로운 조직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여기에 주목했다. 사회적경제가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주체들에 의해 추진 될 때, 사회적경제 조직의 ‘우리 이익(共益)’은 가장 적절한 ‘모두 이익(公益)’을 창출하고, 나아가 ‘우리 이익’과 ‘모두 이익’ 사이의 대립을 ‘시민에 의한 공공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주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활약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유럽은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각 나라별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스웨덴·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 등의 나라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헌법에 명기하고 있고, 용어는 달라도 독일과 영국 등지에서는 대안적 부문(alternative sector)이나 새로운 부문(new sector)으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지금, 유럽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복합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창조적 분야’로서 그 혁신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참조2〉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원칙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각 나라마다 역사적 전통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회적경제의 법제화에 힘쓴 티에리 장테의 설명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①노동자·농민·상인·사업주·시민에 의한 설립과 자유롭고 주체적인 참여, ②1인 1표의 평등에 기초한 사업운영, ③잉여금의 공정한 배분, ④적립금의 분할 금지 혹은 제한, ⑤조합원 간의 내부적 연대와 조합간 외부적 연대, ⑥개인의 존엄·책임·만족·발전을 지향, ⑦국가와 공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의 원칙에 의해 운용된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벨기에의 경우는 사회적경제를 “①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 ②경영의 자율성, ③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④수익 분배에 있어 자본보다 우선하는 인간과 노동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상호부조 조직·결사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

스웨덴의 경우는 사회적경제를 “민주주의 가치에 기초해 공적 부문에서 독립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그 활동의 목표는 공익 혹은 회원에 대한 이익에 있지 이윤에 있지 않다”고 정의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유추해볼 때, 우리는 유럽에서의 사회적경제의 기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 ① 주체 : 사회적경제의 주체는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참여한 노동자·농민·상인·사업주·시민이다.
- ② 목적 : 사회적경제의 목적은 그 구성원과 구성원을 넘어선 모든 사람들의 존엄·책임·만족·발전을 위한 것이다.
- ③ 운영 :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의 평등에 기초해 1인 1표의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따라서 수익 분배 또한 자본보다 인간과 그 노동에 우선한다.
- ④ 대외 관계 : 사회적경제는 행정의 수행기관이 아니며, 나아가 국가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 ⑤ 수행 :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상호부조 조직·결사체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의해 수행된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

사회적경제의 재등장에 대해 지금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특히 국가에 의해 사회적경제의 법제화와 제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만만치 않다. 장원봉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다음의 세 경향을 띤다.

먼저, 사회적경제를 통해 시장사회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해방적 관점이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를 실업과 복지후퇴 같은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완충지대로 바라보는 보완적 관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는 결국 공공부문의 민영화 전략의 하나일 뿐이어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적 관점이 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사회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다. 그것은 단지 시장사회로부터 배제당한 사람들이 주체라는 점에서, 즉 시장사회를 주도하는 자본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무산자 계급이 사회적경제의 주체라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사회적경제가 시장사회를 넘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인 이유는, 사회적경제의 전개방향이 <자본=국가>라는 시장사회의 바깥을 향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의 전개방식이 <상품 교역=착취와 재분배>라는 시장사회에서의 교역 방식과는 다른 호혜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경제는 누가 뭐라 해도 시장이 양산해놓고 국가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유기(遺棄)를 보완하는 도구적 활동이다. 사회적경제는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도 사회 급여에 의존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되찾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며, 한 생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실업상태에 놓인 노동자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을 위한 권리옹호일 수도 있고, 직업훈련과 일자리 알선을 위한 노동매개일 수도 있으며, 의료나 주택 등 기초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일 수도 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유형으로 전개하든 사회적경제의 유용성은 이런 도구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활동에 의해 확보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시장사회 안에서 진행시키기 때문에 계획이 성공하면 할수록 시장사회에 포섭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아니 오히려 사회적경제가 쌓아올린 혁신적 성과는 언젠가는 국가에 수렴되고 시장에 포섭될 것들이고, 이는 사회적경제의 활동이 <자본=국가>라는 시장사회의 바깥을 지향하면서도 실제 활동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결말이다. 문제는 수렴과 포섭이 아니라 그 다음이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활동이 <자본=국가>의 영역 안으로 수렴돼 들어갈 때, 사회적경제가 또 다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혁신적 잠재력을 드러내느냐에 달려있다. 사회적경제의 민주성·자율성·참여주의의 상실은, 따라서 시장과 국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진영 내부에 있다고 보아야 옳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해방적·보완적·비판적 관점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는 태일의 문제가 아니라, 참다운 사회적경제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관점이다. 해방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는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사회를 넘어서는 통찰과 상상력을 배양해야 하고, 보완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는 현실의 시장사회

안에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 계획을 축적해야 하며, 비판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는 자신의 실천이 가져올 제도화를 경계하면서 부단히 혁신해야 한다.

3. 생명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판과 수렴 - 아니다 그렇다(不然其然)

유럽은 분명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모델로서 사회적경제에 더욱 주목할 것이다. 사회적경제라 이름 붙이든 다른 이름을 붙이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대해 우리는, 해방적이거나 보완적이거나 혹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추종과 비판을 거듭할 것이다. 추종은 그렇다(其然)이고, 비판은 아니다(不然)이다. 국가에 의해 사회적경제 논의가 주도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시장과 국가에 대한 환상(幻想)과 환멸(幻滅)이 모두 헛것에 대한 집착이듯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방의 추종과 비판은 이를 잘못 이해한 데서 발생한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그렇다(其然)이거나 아니다(不然)가 아니라, 아니면서 그렇다(不然其然)이다. 시장을 극복하면서 시장을 만들어가야 하듯이, 유럽의 관례적 사회적경제를 넘어서면서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유럽과는 다른 사회적경제를 제시함으로써, 유럽의 사회적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 역시도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는 유럽의 사회적경제의 ‘그렇다’에 대해 언급해 왔다. 그리고 이제 나는 유럽의 사회적경제의 ‘아니다’에 대해 언급할 참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사회적경제가 재등장한 유럽과 비교해 무엇이 다른지, 따라서 사회적경제에 기대되는 역할은 또 무엇이 다른지, 나아가 그 역할을 추동할 사회적경제 진영의 역사와 역량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이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다. 다른 점을 찾음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의 참모습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먼저 사회적경제가 처한 사회적 현실의 차이에 대해서다.

유럽의 경우, 사회적경제는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과 실업의 문제,

그리고 시장의 세계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위기로부터 재등장했다. 우리의 경우도 이런 사회적 현실에서 예외는 아니다. 고도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주도형 중화학 공업은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폭에 따른 수출 상대국의 불만, 대내외 기술 격차의 축소 등으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불안한 수출을 내수 진작으로 타개해보려 하지만,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수백만에게 내수를 끌어올릴 소득이 있을 리 없다. 그렇다고 복지국가가 있어 불안한 미래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있는 복지도 급속한 고령화와 재정건전성 위기로 인해 오히려 축소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세금은 늘어나는데 돌아오는 건 적어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유럽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과 실업, 복지국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 사회는 유럽과 비교해 한층 복잡적이고 다중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위기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향하는 산업구조의 전환, 재정급부형 복지에서 서비스제공형 복지로 향하는 복지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위기다. 더욱이 그런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유럽은 시민의 참여, 새로운 조직의 구축, 시민적 공공성의 확보, 지역의 복원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숨은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있다. 정치가 선도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시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를 향해 정치가 내려와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현실은, 훨씬 복잡적이고 다중적이다. 우리에게 있어 산업구조의 전환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이면서 동시에 농민·자영업자·여성·청년의 생업의 위기이기도 하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은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실업의 문제를 야기하지만, 생업의 위기는 고용된 적이 없거나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의 생존의 위기를 의미한다. 우리에게 있어 복지국가의 위기는 국가에 의한 재정급부형 복지에서 서비스제공형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동시에, 복지체계가 채 정비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몰고 올 복지 수요에 대한 시급한 대응을 의미하기도 한다. 산업구조 전환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생존의 위기인 것이고, 복지체계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복지부재의 위기인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그 사회가 놓인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의미와 역할을 달리 한다. 유럽과 같은 산업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실업·사회적 배제·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사회에서 그것은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 즉 식량공급의 안정, 교육·건강·복지·주택 등과 같은 생활상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응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마찬가지로 옛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사회적경제는, 시민 정신·민주주의·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제공하는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복잡적이고 다중적인 만큼이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우리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 또한 어찌면 이 모두를 포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생활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새로운 직장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다. 사회적경제의 원동력인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종종 정책 동원으로 이용해온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민주적 시민 의식이 고양되어야 한다. 유럽만큼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더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에 의한 복지의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해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런 훨씬 복잡적이고 다중적인 현실이야말로,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의 훨씬 복잡적이고 다중적이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필요로 하는 이유다. 우리의 사회적경제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노동을 포괄하는 생존이며 복지를 포괄하는 돌봄이어야 한다. 나아가 그 대상은, 교환에 참여해온 시민들만이 아니라 교환에 참여하지 못해본 모든 생명을 향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경제가 서구의 사회적경제와 다른 부분이고 넘어서야 할 점이다.

유럽의 사회적경제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갖는 또 하나의 차이는, 사회적경제 추진 주체들의 역사와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각종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안에 뿌리내려왔다. 시장이 산업혁명과 시장의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를 포섭해 공동체를 파괴해갈 때부터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생겨났고, 이들은 시장의 무자비한 확장으로부터 민중의 삶을 굳건히 지켜왔다. 이런 그들의 활약이 사회전체의 시스템으로 제

도화되면서 지금과 같은 유럽의 시장·국가·사회라는 복합사회가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구조의 대전환과 복지 위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금 각 영역 간 장벽을 허물어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 응답하고자 연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사가 그리 오래된 편이 아니고 사회 안에서 충분히 뿌리내리지도 못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성과를 사회 전체를 향해 제도화시켜본 경험도 별로 없다. 하지만 이런 짧은 역사와 성과의 일천함보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저조한 참여민주주의와 이를 대신하는 국가에의 종속성에 있다. 저조한 참여민주주의는 당연히 새로운 사회적 필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자신의 역량을 자발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 대응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적 권한과 강력한 지불유인책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노동의 유연성 강화와 복지의 시장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용될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것일까. 내부적으로 역사와 성과의 일천함, 저조한 참여민주주의와 국가에의 종속성을 띠어온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노동을 포괄하는 생존, 복지를 포괄하는 돌봄이라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이면서 훨씬 근본적인 사회적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는, 그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유럽의 사회적경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사회적경제는 필요하고 또 우리는 이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

다만 아닌(不然) 사회적경제가 그런(其然) 사회적경제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아닌 것을 그런 것으로 삭히는 과정이 그 하나이고, 이렇게 삭혀진 그런 것을 밖으로 새로이 드러내는 과정이 또 하나다. 논어에 나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 함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온고(溫故)는 관례적인 것을 삭혀 내 안에 쌓는 것이고, 지신(知新)은 이렇게 쌓인 것이 새롭게 행해져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온고지신은 옛 학문에 대한 배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기보다, 아닌 것을 그런

것으로 삭혀 새로이 드러내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다.

물론 이렇게 삭히고 드러내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관례적인 것들을 삭혀 내 것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정신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내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데 필요한 것이 전략이다. 유럽의 사회적경제를 우리의 사회적경제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우리의 정신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사회적경제를 밖으로 드러내는 데 필요한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우리는 과연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 것으로 만든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 나름의 길을 찾아본 것이 이번 장의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 나름의 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사회적경제의 주체와 그 행위 동기 - 지기금지(至氣금지) 원위대강(願爲大降)

사회적경제는 당연히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의해 추진된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을 일궈내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회적경제와 그 추진 조직들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이다. 시장과 국가는 사람을 어떻게 보아왔는지, 이에 비해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제껏 사회적경제 진영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 사람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사회적경제는 국가나 시장 경제의 보완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생명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를 논하는 데 있어 사람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끌어내는 동기이고 목적이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의해 추진되고, 그런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결국 사람이 무슨 동기와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하느냐에 달려있다. 시장과 국가는 이런 동기와 목적을 어떻게 봤는지, 사회적경제는 이를 또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경제 진영은 이제껏 시장과 국가의 설명에 의존해왔다. 생명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다

른 사람과 관계하는 동기와 목적에 대한 시장과 국가와는 다른 방식의 설명이 필요하다.

시장 경제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 근대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에서 사람에 대해, 그리고 그 사람의 경제적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자기 안전이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대중이다. 그런 이기심이 자기 환경을 개선하려는 욕구를 낳고,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된다. 이기심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이기심은 다만 어떤 제도적 조건과 결합해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기도 할 뿐이다. 따라서 이기심이 이런 해악을 초래하지 않게 하려면, 내 이기심을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공평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모든 사람은 결국 대중의 일원이고, 대중의 일원으로서의 특권에 만족해야 한다.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오만한 이기심이다.

같은 이야기를 시장 경제의 대척점에 있던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또 이렇게 말한다.

나(마르크스)는 결코 자본가와 지주를 장밋빛으로 아름답게 그리지는 않았다. 여기서 개인들이 문제로 되는 것은 오직 그들이 경제적 범주의 인격화이고, 일정한 계급관계와 이해관계의 담당자인 한에서다. 나의 입장은 다른 입장과는 달리, 경제적 사회구성의 발전을 자연사적 과정으로 보는 것이지 개인이 이런 관계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개인은 주관적으로 아무리 이런 관계들을 초월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그것들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대중 혹은 계급의 일원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동기는 개인적 이기심이나 계급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스미스나 마르크스 같은 고명한 식자들은 사람과 그 사람의 경제적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나아가 그런 대중 혹은 계급의 일원으로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개인적이고 계급적인 이기적 동기야말로, 사회 발전과 변혁의 동력이라 믿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스미스가 말하는 이기적 개인들의 집합이 마르크스에 이르러서는 계급으로 인격화됐을 뿐

이다. 스미스는 대중의 한 사람임을 자각함으로써 사회적 해악이 되는 이기심을 자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마르크스는 자신이 속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자각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다고 믿었다. 자본·자연·노동이라는 경제적 제요소를 자본가·지주·노동자로 범주화하고 인격화해서 노동자로 하여금 역사 변혁의 대오에 합류시키려 한 마르크스의 고집스런 집착은, 인간 본성과 사회 공리 사이에서 갈등과 추락을 거듭하는 스미스적 인간의 고뇌에 비하면 그나마 순진한 편이다.

자, 그럼 사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과연 올바른 걸까. 아니 옳다 그르다를 떠나 사회적경제는 과연 사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나는 대중의 일원이나 경제적 범주의 인격화로 사람을 규정하는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관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씨족사회에서의 성(姓), 민족국가에서의 국적, 현대사회의 계급이나 성(性)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설명 가운데 하나일 뿐 사람 자체가 아니다. 사람을 군집(群集)의 하나로 이해하는 이런 시각은 경제 사회의 변천을 인간의 역사에서 자연사로 매도시킬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시장의 전체주의와 정치적 파시즘, 그리고 가부장적 가족제의 출현을 당연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이런 그들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사회와 정치파시즘과 가부장제를 극복하겠다고 나선 사회적경제 진영에서조차 이런 사고들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다.

19세기 이래로 대부분의 식자들이 사람을 이기적 대중이나 계급의 한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너무도 당연히 온 세상을 개인적이고 계급적인 이해 쟁탈의 아수라장으로 몰아갔을 때, 그리고 이런 기운이 제1차 흑선에 실려 조선 땅에 상륙해 들어왔을 때, 수운 최제우 선생은 경상도 골짜기에서 한울로부터 계시(啓示)를 받아 그 내용을 아래 스물한 자 주문에 담았다.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지기(至氣)는 천지의 뿌리이며 만물의 어머니고 생명이다. 만물이 그에서 나서 그리로 돌아간다. 금지(今至)는 내가 이런 지기(至氣)임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기금지(至氣今至)는, 내가 곧 지기(至氣) 즉 지극한 기운인 한울이라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주체는 ‘나’다. 그리고 이런 나는, 스미스가 이야기한 사적(私的)⁴⁾ 대중이나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몰아적(沒我的) 계급이 아닌, 지극히 신령스런 기운(至氣)이고 더 이상 나뉘어 쪼개질 수 없는(in-dividual)⁵⁾ 광대무변한 존재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적경제의 주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다.

지기금지(至氣今至)는 이렇게 내가 곧 지극한 기운인 한울이라는 일종의 선언(宣言)이다. 그것은 마치 한살림운동이 그 출발 지점에서 ‘한살림선언’을 통해 인간은 지극한 기운이라고 선언했던 것과 같은 이치다. 그리고 이 선언은 지금, 생명의 먹거리기를 기르고 나누고 먹는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운동을 확장해갈 때, 다시금 깊이 깨닫고 되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런 ‘나’는 무슨 동기로 다른 사람과 관계할까. 스미스는 이 동기를 이기심으로 이해했고, 마르크스는 이를 계급적 이해관계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개인적이든 계급적이든 인간의 한 속성인 이기심과 사회적 산물인 인간의 임노동성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오히려 이를 사회 발전과 인간 해방의 원동력으로 오도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를 극복하겠다고 나선 사회적경제 진영에서조차 그 경제 활동의 동기를 여기에서 찾고 있다.

생명의 관점에서 한 인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동기를 찾아야 하고, 그 동기에

4) 사적(私的)의 사(私)는 모두의 땅에서 수확한 벼(禾)를 사사로이(△)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람에 대해 공동체가 행하는 징벌은 공민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deprive)이었고, 여기서 사적(private)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겼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 긍정성을 가미하고 나아가 인간의 지향으로까지 각색한 것은, 자유방입의 시장사회를 위한 의도된 속임수였던 것이다.

5) 스물 한 자 주문에 대한 수운 최제우 선생의 설명 가운데 지(至)는 극대이면서 극소라는 말이 있다. 극소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in-dividual)이고, 이는 인간의 경우에는 한 개인을 의미한다.

대해 수운 최제우 선생은 스물한 자 주문의 두 번째 마디인 원위대강(願爲大降)을 통해 이렇게 설명한다.

원위(願爲)는 간절한 바람과 노력이고, 대강(大降)은 그런 바람과 노력으로 인해 마침내 우주의 지기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이다. 내가 곧 지극한 기운인 한울이지만 이는 간절한 바람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런 노력을 통해 한울인 나는 더 큰 한울과 하나된다.

원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고, 대강은 그런 행위가 향하는 목적이면서 동시에 행위의 결과다. 한 사람이 경제 행위를 하는 진정한 동기는, 지극히 신령스런 기운인 내가 또 다른 신령스런 기운인 다른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내 신령스러움을 발현하고 완성해가는 데 있다.

이를 일본의 경제학자 고(故) 다마노이 요시로(玉野井 芳郎)는 ‘일체화(identification)’라 표현했다. 돈벌기·효율 존중·폭력 혁명이라는 수단 중심의 남성 원리가 아닌, 목적과 수단이 하나인 생명의 세계, 앞으로 올 세대까지도 포함하는 생명의 흐름에 자신을 일체화하려는 노력이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적경제의 행위 동기이면서 동시에 결과다. 지기금지(至氣今至)가 선언이라면, 원위대강(願爲大降)은 일종의 서약(誓約)이다. 선언이 믿음의 대상이라면, 그런 믿음은 간절한 바람과 부단한 노력의 서약을 통해 내 것이 된다.

굳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 싶지만, 여전히 우리 사고를 지배하는 이기(利己)와 이타(利他)라는 대립적 행위 동기, 그리고 이로 인해 갖추어지는 체제론에 빚대어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 경제에서 사람은 이기적 대중이다. 그런 대중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목적은 자기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국가 경제에서 사람은 계급 혹은 계층과 같은 이해집단의 한 구성원이다. 그리고 그런 집단이 다른 집단과 관계하는 목적 역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이나 타집단과 관계하기 때문에, 이를 누군가는 조정해야만 한다. 시장 경제에서 그 조정자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자기조정이고, 국가 경제에서 그 조정자는 국가의 보이는 권력이다.

이런 조정을 통해 개인 간 집단 간 이기적 목적이 균형 잡혀갈 때, 우리는 이런 체제를 민주주의 자유시장 국가라 부른다. 스미스든 마르크스든 그 표현하는 언어는 달랐고 의회민주주의든 국가사회주의든 그 추진하는 방식은 달랐어도, 이런 인식에 기초해 체제를 구상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에서 사람의 행위 동기는, 시장 경제에서 말하는 자기 이익의 충족도 아니고 국가 경제에서 말하는 집단 이익의 충족도 아니다. 더욱이 그 사이의 균형을 통한 민주주의 자유시장 국가라는 체제를 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경제에서 사람의 행위 동기는, 이기와 이타의 혼원일기(渾元一氣)인 자리리타(自利利他)다. 나에게 이로운 것이 다른 이를 이롭게 하고, 다른 이를 이롭게 해야 내게 이롭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로움(利)은 경제적 이해득실이 아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로움(益)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타(他)는 다른 사람만이 아닌 모든 다른 생명을 포괄한다.

자리리타(自利利他)는, 한울인 내가(至氣) 더 큰 한울과 하나 되기 위해(大降) 다른 한울과 관계하는(願爲)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리리타는,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타자와 관계하는 시장 경제의 동기와는 다르고, 집단이 집단과 관계하는 국가 경제의 주체와도 다르다. 물론 이렇게 나에게 이로운(自利) 것과 타자를 이롭게 하는(利他) 것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시(侍) 즉 내면의 모심과 외면의 살림이 통일적인 혼원일기로서 작동하는 때문이고, 이런 혼원일기는 뒤에서 말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선택과 자기조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자에게 확보되는(各知) 것이며, 이는 곧 시장과 국가에 의한 조정이 아닌 스스로의 자치와 노력에 의해 무위이화(無爲而化)를 달성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경제 행위 - 시천주(侍天主) 조화정(造化定)

사회적경제의 주체와 그 동기에 대한 이상과 같은 이해는, 스물한 자 주문 가운데 핵심인 ‘모심(侍)’에 대한 수운 선생의 해설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다.

“내유신령 외유기화 일세지인 각지불이자야”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시(侍)에 대한 수운 선생의 상세 설명 가운데 사회적경제의 경제 행위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나와 타자 사이를 매개하는 경제 행위의 ‘매개재’에 관한 것이고, 둘은 내가 타자와 경제 행위를 하는 ‘목적’과 ‘결과’에 관한 것이며, 셋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경제 행위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먼저 매개재에 대해서다.

근대경제학이든 마르크스경제학이든, 시장 경제든 국가 경제든 인간의 지금까지 모든 사유와 체제 안에서 경제 행위의 매개재는 물질로 이해되었고, 경제 행위는 이런 물질의 질료적 전환으로 이해돼왔다. 자연을 포함해 타자로부터 물질을 얻고, 그 물질에 자본과 노동을 투여해서 생산하며, 이렇게 생산된 질료적 전환물을 타자를 향한 판매하거나 자연에게로 투기(投棄)하는 것, 이를 경제로 봐왔던 것이다. 물론 이런 이해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교환을 자연 밖에서 관찰한 결과 때문이었다.

이런 문제를 뛰어넘으려 했던 엔트로피 경제학의 경우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다. 그들은 비록 자연과 인간 사이의 교환을 그 안에서 바라보고, 나아가 경제와 사회를 생명계라는 보다 넓은 계 안에 내포된 유형으로 설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서로 다른 계 사이를 관통하는 물질의 본질에 대해서는 ‘생명이란 여분의 엔트로피를 밖으로 버리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엔트로피라는 형이상학적 개념을 가정하는 데 그쳤다. 자연을 극복하는 인간이라는 기존 경제학이 지닌 문제를 극복하기는 했지만, 자연을 수용하는 인간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빠진 채, 자연을 수용하는 것이 마치 자연을 살리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수운 선생은, 시(侍)에 대한 위에서의 상제 설명을 통해 그 매개체가 다름 아닌 생명이라고 설파한다.

내유신령(內有神靈)은 나는 곧 신령한 기운 즉 지기(至氣)라는 것이고, 외유기화(外有氣化)는 이런 내가 다른 사람을 포함해 모든 생명의 역시 신령한 기운을 살려낸다는 것이며, 그 살려내는 행위 또한 신령한 기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명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경제의 경제 행위는, 그 주체인 나도 지극한 기운이고 그 객체인 타자도 지극한 기운이며 지극한 기운과 지극한 기운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체 역시 지극한 기운이라는 것이다. 지극한 기운이 지극한 기운으로써 지극한 기운의 방식으로 지극한 기운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극한 기운인 내가 지극한 기운인 타자와 행하는 경제적 관계라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지극한 기운은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생명’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주체와 목적과 수단과 대상이 하나의 매개체로 이어져 있고, 그 매개체는 실체이면서 동시에 개념일 뿐 아니라, 그 주체와 대상이 극소로부터 시작해서 극대로 이어지는 사람과 경제와 사회와 생명계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인데, 이 부분은 이미 사회적경제의 행위 동기와 원위대강(願爲大降)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다음과 같다. 모심에 대한 수운 선생의 상제 설명에서 가장 핵심적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는 이기적인 개인이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이기적인 대중과 관계하는 것이다. 물론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사람은, 다른 대중의 이기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전략적 타자를 통한 자기 이익의 극대화,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경제 행위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과 집단 사이의 자기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관계다. 물론 이렇게 자기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타 집단의 이익도 들어줘야 한다. 윤리

적 타자를 통한 집단 이익의 확보, 그것이 바로 국가 경제를 이끄는 경제 행위인 것이다.

이에 비해 생명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경제의 경제 행위는, 그 주체가 지극한 기운인 나(內有神靈)이고, 그런 내가 다른 지극한 기운을 살려내기(外有氣化) 위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며, 그런 목적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各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一世之人) 이런 숨겨진 이치를(不移) 각자가 알고 행하는(各知) 것이 바로 모심(侍)이고, 이를 통해 비로소 조화(造化) 즉 천지만물이 한가지로 살아갈 길을 찾는 무위이화(無爲而化)에 이르는(定) 결과를 낳는다.

내유신령이 내면의 모심이라면, 외유기화는 외면의 살림이다. 물론 이때의 모심과 살림의 주체와 대상, 그 주체와 대상을 잇는 매개는 모두 지극히 신령스런 기운(至氣) 즉 생명이다. 그리고 이런 모심과 살림의 행위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전개하는 일세지인(一世之人) 각지불이(各知不移)는 자기선택이고 자기조직화다. 생활의 각 영역에서 자기선택에 따른 자기 방식으로 모심과 살림의 협동적 삶을 자기조직화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이로우면서 동시에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조화정(造化定)의 길인 것이다.

삶의 협동적 관계망을 벗어난 체제론적 구상으로 자리(自利)와 이타(利他), 내유신령(內有神靈)과 외유기화(外有氣化)의 통일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자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자기조직화의 길에서만 자리-리타(自利利他)와 내유신령-외유기화(內有神靈 外有氣化)를 이루게 된다. 생명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가 체제론을 대신해 지역론에 새로이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유럽의 사회적경제가 중시하는 지역에 대한 생명론적 이해도 여기서 나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조화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다.

사람의 경제 행위란 다른 말로 하면 타자와의 교환이다. 교환의 세 가지 방식, 즉 호혜·재분배·교역에 대해서는 이미 1장에서 그 역사적 등장과 성격을 설명한 바 있다. 내가 이렇게 긴 분량으로 세 가지 교환 방식을 상술했던 이유는, 각지불

이(各知不移)의 자기선택과 자기조직화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삼단논법을 도출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구체적 전개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하나, 교환에는 호혜·재분배·교역이라는 변하지 않는 세 방식이 있다.(不移)
둘, 사회에는 공동체·국가·시장이라는 각기 다른 경제 주체가 있다.(各)
셋, 각각의 경제 주체들은 제 나름으로 교환의 세 방식을 내재화한다.(知)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생명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경제의 기본적인 전개 방향이다. 사회적경제가 경제학이 아니라 경제로, 형식적 경제가 아니라 실제적 경제로, 개념으로서의 경제가 아니라 생활과 운동으로서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이 논법은 중요한 부분이다.

준비 부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겠지만, 이 글에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동체·국가·시장은 모두 호혜·재분배·교환을 각기 자기 나름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는 재분배뿐만 아니라 그 안에 호혜와 교환을 내재하고 있고, 시장은 교환뿐만 아니라 그 안에 호혜와 재분배를 내재하고 있다. 국가는 재분배를 기초로 호혜와 교환을 행하고, 시장은 교환을 바탕으로 호혜와 재분배를 행한다.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공동체의 유지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고, 시장에서의 교환은 모르던 사람도 알게 해주고 집중된 재화를 평탄케 한다. 이렇게 각기 제 나름으로 전체를 지향하는 것이 국가와 시장의 모습이다.

하지만 국가와 시장에 의한 이런 호혜와 교환과 재분배의 '관계' 만으로는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지극한 기운(至氣)으로 여기는 모심(侍)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으로 신령함(內有神靈)과 밖으로 기화함(外有氣化)을 추구해가는 사회적경제에 의한 호혜·교환·재분배의 삼중교호가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적경제의 시공간 - 영세불망(永世不忘) 만사지(萬事知)

수운 최제우 선생의 스물한 자 주문 가운데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는 영세불망(永世不忘) 만사지(萬事知)는 보통 “영원토록 잊지 않으면 온갖 일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곤 한다. 글자 그대로의 직역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주문은 엄밀히 말해, 시천주(侍天主) 조화정(造化定)의 경제 행위가 담아내야 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런 인식하에 경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의 결과에 대한 것이다.

한울인 내가 다른 한울인 온 생명을 향해 그 숨겨진 한울(不移)을 드러내기 위해 내 자리에서 내 방식으로 전개하는 자기조직화(各知)라는 수운 선생의 설명에 대해, 스미스는 각지(各知)를 ‘분업’으로 불이(不移)를 ‘이익’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개개인이 분업을 통해 각자 이익을 얻는 행위가 전체 이익과 맞닿는 원리로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인다.

사람은 자신의 안전과 이익만을 추구하려 한다. 그 이익은 가령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이런 행동을 의도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그가 얼마나 촉진시키는지도 모른 채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람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를 낳는다.

좁은 의미에서 사람의 경제활동은 자원의 분배활동이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할까를 결정하는 것이 경제활동의 주요 과제다. 시장 경제는 이런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비효율적인 경제 행위는 시장에 의해 도태되고 결국은 효율적인 행위만을 남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손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간이 들어와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나의 이윤 추구 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때의 공공 안에 과거의 조상이나 미래의 후손, 시장에서 낙오되거나 처음부터 배제돼온 이들이 들어있을 리 없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확보되는 공공의 이익은, 보이는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래 당사자, 즉 국내 시장을 공유하는 제한된 시공간 안에서나 가능할 일이다. 핵발전의 방사성 폐기물을 떠안아야 하는 미래세대, 생존을 위협당하면서도 식량을 수출해야 하는 제3세계 농민들에게까지 보이지 않는 손은 미치지 않는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얻어지는 것은, 그 손의 힘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보이는 사람들에게나 행복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지금 각자의 이기적인 경제 활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미래의 사회 전체 이익에 공헌할 것이라는 스미스의 믿음은, 실은 현재 신에 대한 믿음이 최후의 심판 때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구원받을 것이라는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경제적 해석이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공간은 시간에 의해 흡수돼 버리고, 공간을 흡수한 현재는 추상화된 미래를 향해가는 불가역적 여정이다. 현재의 삶은 미래 종말과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고, 현재의 경제 행위는 미래의 가치에 의해서만 평가된다. 하지만 그 미래는 추상화되어 있고 미래를 향한 여정 또한 끝이 없기 때문에, 종말론적 시공간 개념에서의 타자는 현재의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타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타자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는 윤리적 가치가 내재해 있다. 혹시나 내 이기적인 경제 행위가 타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조작당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지극한 기운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으로써의 당연한 걱정들에 대해 스미스는 거짓 위안을 주었다. “걱정 마세요, 당신과 타자 사이를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연결해 당신의 이익 추구 행위가 타자에게 이익이 되게 해줄 테니.” 생명으로서의 당연한 마음과 현실에서의 경제 행위 사이에서 느끼는 사람의 불편함을 해소해줬다는 점에서, 스미스는 시장 경제 주체들에게 구세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그의 구원의 메시지는 시장 경제라는 신을 믿는 이들에게나 통용되는 제한적인 것이다.

마르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경제를 화폐에서 출발해서 생산과 소비를 거쳐 다시 화폐로 이어지는 자본의 영원한 회전 운동으로 그렸다. 그에게 있어 시간은 자본의 회전 운동이 영원을 향해 치닫는 단선적인 것이었고, 그런 시

간의 흐름 안에 모든 공간을 투입에 대한 산출의 재화적 효율성만 고려한 채 흡수시켜 버렸다. 근대경제학의 시공간 개념을 신 대신에 자본으로 대체했을 뿐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내가 행하는 지금 현재의 경제 행위가 시공간의 확장을 통해 타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명료한 메시지가, 수운 선생의 스물한 자 주문 가운데 마지막인 영세불망(永世不忘) 만사지(萬事知)에 담겨 있다.

영세(永世)란 내 모든 생애주기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과거 세대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영원한 세대라는 시간의 광대함이다. 만사(萬事)란 내 소소한 일상사(日常事)이면서 동시에, 나를 둘러싼 생명계 전체와 나와의 관계사(關係事)라는 공간의 무변함이다.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 극소와 극대라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타자로서 추상화된 미래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축적되어 있다. 모든 시간은 잊지 않고 기억되고(不忘), 모든 공간은 보이지 않아도 알아지게(知) 내 안에 내려와 하나를 이룬다(大降). 내가 행하는 지금 현재의 경제 행위는, 영세(永世)의 시간과 만사(萬事)의 공간을 축적(大降)해 있음으로 해서 지극한 기운(至氣)에 이르게 된다(今至).

수운 선생의 스물한 자 주문은, 앞에서 보면 한 생명이 온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이고, 뒤에서 보면 온 생명이 한 생명에게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앞에서 보면 그것은 한 생명으로써 내가 모든 생명의 역사와 노력을 알아 온 생명을 모시고 살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뒤에서 보면 그것은 이런 내 노력을 통해 내게 온 생명의 기운이 미친다는 것이다. 영세불망(永世不忘) 만사지(萬事知)는, 한 생명의 경제 행위가 담아내야 할 온 생명을 향한 시공간의 확장이면서 동시에, 그런 경제 행위를 통해 한 생명이 얻게 되는 온 생명과의 일체다.

사회적경제가 재등장하게 된 배경은, 시장 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지 못해온 생명까지를 보듬기 위해서다. 이것이 제2기 사회적경제가 제1기를 이으면서도 궤를 달리하는 요체다. 세대간의 갈등, 국내외적 빈부 격차, 자연에 대한 착취와 오염 문제는, 시장 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아온 시공간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증명한다. 그리고 이런 시장 경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미래와 미지 세계의 타자에 대한 윤리적 배려

가 아니고, 그것이 구체적인 지금 현재의 내 문제라는 인식이다. 물론 그런 인식은 시공간을 흐름으로서가 아니라 축적으로서 이해해야만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정보화로 일컫는 물질개벽을 통해 죽어버린 과거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느낄 수 없는 미천한 이들의 아픔과 보이지 않는 저 먼 곳 세상일이 시시각각으로 내 안에 축적되고 있다. 물질의 개벽 시기에 정신이 개벽할 조건이 마련된 것이고, 이제 생명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가 태동할 준비가 돼있는 것이다.

생명(生命).

그것은 살아 생동하는 한울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라는 한울의 명령이다. 한울의 명에 따라 생동하는 한울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바로 운명(運命)이다.

한울은 살라 명하면서 동시에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준다. 이집트를 탈출한 유대인들에게는 만나를 주었고, 마고성 옛 우리 조상들에게는 지유(地乳)를 주었다. 물론 이런 만나와 지유는, 살라 명한 한울의 자기희생이다.

모든 생명은 한울이 준 이 자기희생을 받아먹음으로써 한울이 명한 삶을 산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람 역시도 한울의 젖을 물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 없다. 다만 사람이 다른 생명과 다른 점은, 한울이 준 젖의 의미를 알고, 또 새로운 한울의 젖을 찾아 긴 여정을 거듭해왔다는 데 있다.

수렵과 채집의 시대에 숲속을 뛰노는 동식물, 농경과 목축의 시대에 곡식과 가축을 길러주는 들판의 비바람, 산업 시대에 석탄이나 석유 같은 땅속에 묻힌 한울의 발효물, 그리고 태양 시대에 한울의 빛, …: 젖의 유형은 변하고 확장됐어도,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도 다른 생명과 마찬가지로 한울의 젖을 먹고 산다는 데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모심’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한울이 준 자기희생을 받아먹으며 살라는 한울의 명에 따르는 것, 그것이 인간 운명의 시작인 것이다.

모심이 운명의 시작이라면, 운명의 끝은 살림이다. 한울이 준 젖의 의미를 알고, 한울의 명에 따라 생동하는 한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림이다. 모든 생명은 한울이 준 자기희생을 받아먹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동시에 하루하루를 한울을 향해 되먹이며 살다가, 마침내 온몸을 던져 한울의 먹이가 되어주는 것이

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람 역시도 하루하루를 한울을 향해 젖을 물리고 마침내 온몸을 던져 한울의 먹이가 되어주지 않고는 산다 할 수 없다. 다만 사람이 다른 생명과 다른 점은, 한울을 향한 되먹임의 의미와 방법을 찾아 긴 여정을 거듭해왔다는 데 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은 노자의 ‘죽지만 없어지지 않는 끝없는 삶(死而不亡者壽)’, 예수의 ‘부활’, 수운 선생의 ‘각자가 깨달아 옮기지 않는 것(各知不移者)’을 발견하게 됐다. 경제적 관점에서 ‘살림’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한울을 향해 자기희생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동귀일체(同歸一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라는 명에 따르는 모든 생명이 걸어갈 운명의 끝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야말로 그 길을 깨달은 지구상 유일한 생명이었던 것이다. 생명의 사회적경제는, 일상의 소소함에서 그런 길을 구체화하려는 사람들로 시작될 것이다.

모심과살림연구소 지원 과제 보고서

생명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경제 시론

집 필 김기섭 (파프리카인터내셔널 대표)

펴낸곳 모심과살림연구소

펴낸이 박맹수

펴낸날 2015년 1월 20일

생명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경제 시론